

광주시, 민관협력 버려지는 지하수 생태회복 재활용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A아파트. 2023년 10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수가 솟아났다.

지하수는 하수도를 따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됐고 이로 인한 하수도 사용료가 발생, 이 때부터 매월 1340만원 가량이 입주민들에게 부과됐다.

사용하지도 않은 하수도요금이 부과되자 입주민들은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광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시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해 유출 지하수를 서방천으로 흘려보내 수질 개선과 하천 생태환경 회복은 물론 급수전을 설치해 조경·청소·소방 등 생활용수로도 활용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유출지하수 문제를

유출지하수 하수처리로 매월 1300여만원 하수도요금 폭탄 시공사 배출관로 설치·시 행정 지원으로 하천정화 재활용 광주천 수질 개선 기여... 환경부 공모 조경·소방용수 사용

민·관·기업이 협력해 주민 고충민원 해결과 함께 수자원 재활용의 길을 동시에 열었다.

이는 광주시의 대표적 생활밀착형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시는 2023년 10월 북구 각화동 A 공동주택 건설 공사 중 하루 1100t 가량의 지하수가 자연적으로 유출됐다

지하수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서 입주민들에게 월 1340만원의 하수도 사용요금이 부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됐다.

광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시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 2024년 11월 '고충민원 조정회의'에서 유출 지하수를 하수도가 아닌 서방천으로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시공사가 방류관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광주시는 하천 방류를 행정적으로 지원해 지하수의 공공하수 유입을 원천 차단했다. 이로 인해 매월 약 1340만원 가량의 하수도요금 부담도 해소됐다.

이는 주민의 고충민원 해결뿐 아니라 깨끗한 지하수의 서방천 유입으로 하천수질 개선과 생태환경 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광주시는 유출지하수 활용 사례를 '2025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적용, 국비 9억9600만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경용수·청소용수·소방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급수전 설치 사업'을 2027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김훈 물관리정책과장은 "A아파트 유출지하수 활용은 민·관·기업이 협력해 고충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한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라며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지속가능한 수자원으로 전환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도일 기자

'은둔형 외톨이 발굴·지원' 총력

13개 동,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와 간담회 개최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에서 최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은둔형 외톨이는 일반적으로는 집안, 방안 등 한정적 공간에서 외부 및 사회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번 간담회에는 관내 13개 동 사례업무 담당자와 희망복지팀이 참여한 가운데 동에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통장·자생단체회원·생활업종종사자 등)과 협

려해 지역 내 은둔형외톨이를 발굴하고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에 연계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에서는 대상자와 상담을 통해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기 때문에 대상자발굴이 가장 어렵고 중요하다"면서 "간담회 이후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협력해 대상자를 집중 발굴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전남도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지역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설 방문 신청'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 등을 위해 담당 직원이 직접 시설을 찾아가 신청을 받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상 시설은 노숙인·노인·장애인·정신·한센인 시설 등 총 448개소, 1만 4천 831명이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53만~5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

전남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시설 방문 신청' 운영 28일부터 8월1일까지... 448개소, 1만 4천831명 대상

받는다.

전남도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22개 시군과 읍면동 복지부서를 통해 유선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문 등을 활용해 해당 시설에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안내하고 방문 일정도 사전 협의토록 조치했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설 생활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만큼, 모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촘촘히 챙기겠다"며 "주소지가 해당 시군이 아닌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지급 누락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보호자가 없거나 거동이 불편해 쿠폰 직접 사용이 어려운 생활자의 경우 시설에서 생활자를 위해 쿠폰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조치하고 사후 점검을 하는 등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염선호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1차) "찾아가는 시설 방문 신청" 포스터 내용 요약:

- 대상시설: 노숙인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병원, 장애인시설, 정신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센터
- 지원금(1인당): 1인당 10만원~40만원 (장애인 1인당 15만원~40만원 / 노인·정신장애 1인당 10만원~40만원 / 기타 취약계층 1인당 10만원~40만원)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비밀번호 인증 필요) / 현금 / 현금영수증
- 사용처: 지정·신청시설과 지정된 약점, 약점 30여명 이하 소규모인양해(해당 시설에 신청한 경우) / 지정·신청시설

북구, '시니어 금융 사기 예방 교육' 나선다

금융 사기 예방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제공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금융 사기 피해자 중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 추세인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협력하여 '시니어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

수칙과 대처방안 등 금융 사기 전반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며 '노후를 위한 다양한 금융 지식'은 ▲체계적인 노후 준비 ▲은퇴 후 합리적인 소비 생활 ▲의료·돌봄·일자리 관련 정부 지원 제도 안내 등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금융 지식을 소개한다.

북구는 많은 어르신이 교육에 참여해 금융 사기 피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등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북구청 노인복지과(☎062-410-6347)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교육은 날로 교묘해지는 금융 사기 수법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마련하게 됐다"며 "많은 어르신들이 교육에 참여해 금융 사기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배)는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남구는 24일 "내년도에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를 오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투표 대상 사업은 총 38건이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온라인 투표

남구, 28일~내달 4일까지... 관내 주민 누구나 가능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두달간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한 주민제안사업 83건 가운데 소관부서에서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판명된 사업이다.

소관부서 검토 과정에서 제외된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선거법 등의 영향

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이 대다수였다.

온라인 투표는 오는 28일부터 네이버폼(https://naver.me/G6GZfKYf)을 통해 진행되며, 해당 링크는 오는 28일 오전부터 열린다.

관내 주민이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총 5가지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온라인 투표 결과(30%)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70%) 결과를 합산해 최종 선정된다.

남구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과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11억 가량을 반영할 계획이다"면서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하면서 북리진도 함께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가동 중이다.

이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등 취약계층을 사전에 발굴하고 신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서비스' 가동

전담 콜부터 현장 방문까지... 서구, 촘촘한 민생지원 전략

청을 능동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서구는 ▲전담 콜 운영 ▲거동불편 등 취약계층 대상 사전감지 방문접수 ▲복

지시설 직접 방문 등 신청 문턱을 낮추기 위한 체계를 갖췄다.

서구 돌봄지원과는 문자전용 전담 콜

(010-7192-4847)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문자 한 통으로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접수 후 24시간 이내 방문 일정을 안내한 후 72시간 내 신청부터 지급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이웃돌봄단(164명)과 독거노인생활관리사(206명)가 각각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와 노인맞춤돌봄 중점 요보호 대상자들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 작성과 접수도를 높여준다.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해서도 시설장과 사전협의를 통해 돌봄지원과에서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즉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구 1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각각 '찾아가는 신청' 전담 담당자 지

정과 통화 가능한 전용 전화번호를 마련해 동 단위에서도 주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찾아가는 신청은 단순한 행정지원이 아닌, 정보접근과 거동불편 약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민생회복 전략의 일환"이라며 "지역사회 인적망과 연계한 촘촘하고 따뜻한 현장 중심 돌봄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